

#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7. 4. 12. (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교육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유니온 (02-735-0261 / fax 0303-3447-0261) 민달팽이유니온 (070-4145-9120)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 시민들은 대선날짜를 바꾸었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나눔자리문화공동체(시흥), 부산청년들,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심심한청춘들(전주),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홍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등  
(4월 11일 오후 8시 기준)

2017. 4. 12.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 복단

연락처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010-9930-4650)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010-3042-7565)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010-7277-8321)
-----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은 **4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 복단 앞에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선거를 선거답게 만들기 위한 요구와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합니다.
3.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4.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5.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6.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거캠페인을 위한 3대 과제 제안"을 제안하고, "2017청년대선정책요구안 및 이후 활동계획"을 발표합니다.

##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 “시민들은 대선 날짜를 바꿨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2017년 4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 복단  
사회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
- 기자회견 취지 및 순서 안내
-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 제안 /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연대 발언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2017대선주권자행동)
- 청년유권자가 바라본 2017 대선 / 대학생 김솔아
- 청년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2017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2017 청년유권자행동 이후 활동계획 발표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대통령직 근로계약서, 청와대 임대차계약서, 촛불채무이행각서 작성

## □ 별첨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거를 위한 3가지 제안 및 유권자행동 계획

첨부3)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가) 및 해설

별첨4) 각 정당 후보자 캠프에 보내는 공문

첨부1) 기자회견문

##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이제 시작합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주말의 광장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촛불의 온기는 여전히 광장에, 시민들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모든 신문에 선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광장의 시민도, 청년의 삶도 없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을 눈물과 아픔 속에 보내왔습니다. 메탄올을 뒤집어 쓴 공장에서, 구의역에서, 고시원에서, 반지하, 옥탑방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청년의 삶은 날마다 부서졌고, 더 노력하고 도전하라는 말을 또는 너희만 힘드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1년 전에는 의회 권력을 뒤집었고, 광장에 쏟아져 나와 최고 권력자들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이번 대선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정책 대결과 비전 경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이번 촛불대선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잇는 전격적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탈출하고 싶은 '헬조선'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에도,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잇는 정책 노력은 매우 취약하고 제도 안 보다 제도 바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 후보에 보내는 우리의 요구와 약속을 밝힙니다.

우리는 후보와의 약속이 아닌 '공론의 장'을, '시민참여의 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숫자 속에 갇힌 공약이 아니라, 청년의 삶으로 채워진 공약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의 불쌍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청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문따' 투표, 인기투표가 아닌, 지지와 감시, 견제와 균형을 투표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 바꾸는 선거를 만들 것입니다.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이제 시작합니다.

2017년 4월 12일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거를 위한 3가지 제안

### ■ 배경 및 취지

- 19대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로 열린 '촛불대선'임. 그러나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열망에 비해 각 후보의 비전, 정책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선거 캠프의 운영은 폐쇄적임.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전환이 되도록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야 함.

### ■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거를 위한 3가지 제안

#### 1)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의 <캠프 공간 시민 개방>을 제안함

시민들이 찾아가서 일상의 문제를 말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선거 캠프 공간을 개방해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함. 선거는 '약수의 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함.

#### 2)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의 <시민참여형 정책설명회> 개최를 제안함

대선 후보의 비전과 정책 발표가 일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함.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속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시민들과 권한을 나눠야 함.

#### 3)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의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정책공약 질의응답 플랫폼> 운영을 제안함

대선 후보의 일회성에 그치는 비전과 정책 발표는 시민을 참여의 주체가 아닌 평가만 하는 주체로 남겨두는 것임.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대선 후보 캠프가 답변할 수 있는 온라인 실시간 정책공약 질의응답 플랫폼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함.

## #VoteFor\_2017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계획

### ○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디자인 워크숍

- 슬로건: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

- 일시 및 장소 2017. 4. 15. 1-4시,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

- 방식: 청년 당사자 오픈테이블 및 토론을 통해 차기정부 청년정책 3대 방향 10대 과제 도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온라인 의견수렴 진행

### ○ 새로운 대한민국-청년정책에 대한 대선후보와 청년유권자들의 열린 대담

- 슬로건: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대상: 청년유권자행동 참여단체 및 주요 정당 대선 후보 및 청년정책 담당자 등

- 내용: 청년정책 디자인 워크숍 내용, 온라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연속 좌담형태로 진행

### ○ <#VoteFor 청년 유권자 선언 온라인 인증샷> “나는 000에 투표합니다.”

- 내용: 청년들의 구체적 요구와 정책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 “나는 000에 투표합니다”

- 인증샷들은 개인별 SNS 및 2017대선주권자행동의 캠페인사이트에 게시됨

- 인증샷을 공유할 경우 공통적으로 “#VoteFor” 를 표기함

#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가)

### ■ 정책 방향

- 청년을 '미취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의미 규정

- 고용-노동-주거부채 등 청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아우르는 청년정책의 체계화

- '취업률(일자리 개수)' 일변도였던 기존정책의 목표를 정책대상 및 의제별로 다변화

-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현장 주체-당사자와의 속의·협의(거버넌스) 구조 확립

### ■ 주요 정책 요구안

정책 대상 청년	의제	세부 과제
청년 NEET	고용	구직활동지원 - 청년수당 전국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세입자 청년 주거빈곤 청년	주거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바우처 (디딤돌 / 민달팽이)
학자금대출 청년 신용유이자	부채	(추후 발표)
근로빈곤 청년	노동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최저임금 1만원 고용보험 개혁 - 실업급여 확대 청년의 노조할 권리
대학생	교육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청년 시민 청년 유권자	정치 사회	만 18세 투표권 보장 한국형 청년안전망 도입

\* 이상의 정책요구안을 기초 토대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4월 중에 청년단체/청년정책 활동가와 각 정당 후보자 캠프 간의 릴레이 정책간담회(열린대담)을 정식으로 요청함

참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가) 해설

## I. 고용

### 1. 구직활동지원 - 청년수당 전국화

#### □ 정책목표

-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 □ 정책내용

-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 2.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 정책목표

-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 □ 정책내용

-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 II. 주거

### 1. 계약갱신청구권

#### □ 정책목표

-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 □ 정책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2. 주거바우처(디딤돌 / 민달팽이)

#### □ 정책목표

-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 □ 정책내용

-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갹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 III. 부채

(※ 추후 발표)

## IV. 노동

### 1. 고용보험 개혁 - 실업급여 확대

#### □ 정책목표

-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 □ 정책내용

-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 프리랜서, 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 2.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 □ 정책목표

-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 □ 정책내용

-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 3. 최저임금 1만원

#### □ 정책목표

-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 정책내용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 4. 청년의 노조할 권리

##### □ 정책목표

-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 □ 정책내용

-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 노동조합 결성 부당하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 V. 교육

####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 □ 정책목표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책임을 강화

##### □ 정책내용

-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사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책임 강화
-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VI. 정치

#### 1. 만 18세 투표권 보장

##### □ 정책목표

-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원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 □ 정책내용

-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 2. 한국형 청년안전망 구축

##### □ 정책목표

- 4인가족, 남성, 정규직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전환하여, 이행기 청년이 겪는 고용, 주거, 노동, 부채, 교육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정책 근거 및 전달 체계 구축
-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차원에서 각각 설립된 취업지원기관 등을 연계

##### □ 정책내용

- 청년기본법 제정
-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청년정책 조정협력 기구 신설
- 중앙·지방대학의 각종 취업지원기관(센터)를 ‘청년종합지원센터’로 통합 운영

# #VoteFor\_2017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문서번호 : 2017-공동-04

시행일자 : 2017. 4. 13.

수신 :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

제목 :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거캠페인을 위한 3대 제안 및 청년정책간담회 제안의 건

- 우리아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귀 후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VoteFor\_2017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이하 청년유권자행동)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전국의 25개 청년단체가 ('17. 4. 13. 현재)가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 연대기구입니다.
- 청년유권자 행동은 한국사회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선거,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권자운동을 만들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한국사회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이에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거캠페인을 위한 3대 제안> 및 <청년의 권리가 실현되는 청년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제안 드리니,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회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 각 캠프에서 보내주신 답변서를 토대로 각 캠프의 입장 및 정책간담회 추진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니 참고해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기간에 촉박하겠지만, 시민들의 직접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유권자들에게 귀 당의 청년 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목 : 유권자의 권리가 실현되는 선거캠페인을 위한 3가지 제안 및  
청년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요청의 건

기한 : 2017년 4월 15일(토) 17시까지

방식 : 첨부된 문서를 활용하여 메일로 발송(yunion1030@gmail.com)

문의 :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010-3349-0990)

## 붙임1. 회신 양식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나눔자리문화공동체(시흥), 부산청년들,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심심한청춘들(전주),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홍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 회신요청 1)

유권자의 권리가 실현되는 선거캠페인을 위한 3가지 제안의 건

청년유권자 행동의 제안	1) 캠프 공간 시민 개방 2) 시민참여형 정책설명회 3)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정책공약 질의응답 플랫폼을 운영
귀 캠프의 답변(입장)	

## 회신요청2)

청년의 권리가 실현되는 청년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요청의 건

청년유권자 행동의 제안	주제 : 19대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형식 : 주제에 관한 상호토론을 보장하는 간담회 참가자 : 청년단체/청년정책활동가 & 정당 후보자(캠프) 시기 : 4월 중
귀 캠프의 답변(입장)	